

김영록 지사, 새해 화두로 '광주·전남 대부흥' 제시

정부 과감한 인센티브... 시도민 다양한 의지 담아 통합 추진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잘 분석해 많은 사업을 가져오도록 하고 2026년 새로운 도 자체사업도 발굴하면서 특히 AI·에너지시대 광주·전남이 대부흥하는 새해를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5년 마지막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정부가 통합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므로, 여건이 되면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바로 대통합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새해 화두로 AI·에너지 시대 광주·전남 대부흥을 위한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2021년 통합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는 일부 지역별로 반대가 있었고 중앙부처에서도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의지나 계획이 없어 시·도민의 통합 열기가 식어 안 됐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3월 초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등 통합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통합된 시·도와 되지 않은 시·도 간 경제·정치면에서 격차가 커질 것이므로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시·도민의 의지를 담아 일을 풀어가지"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밝힌 부처별 통합 지방정부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특례 부여 ▲지방교부세·소비세 추가 배분 ▲공공기관 우선 이전 검토 ▲광역특별계



정 및 지특회계 자율계정 규모 단계적 확대 ▲광역별 '성장엔진' 선정 ▲첨단국가산단 조성으로 AI데이터센터, RE100 등 지역 전력산업 육성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은 한 뿌리인데 40년 동안 인위적이고 행정적으로 나눠지면서 경제적으로 광장이 불편한 점이 많아졌다"며 "전남은 재생에너지 등이 풍부하고, 광주는 고급인력·벤처 등이 풍부하므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함께 발전하는 밝은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미 지난 2021년 용역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 접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양 시·도의 오피니

언 리더, 시·도민, 시·도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빠르게 의지를 모은다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설치를 서둘러 과거 용역보고서에 따라 추진 절차를 따져보고 관련 법령과 타 광역단체 통합 추진 사례 등도 참고할 것을 지시했다.

새해 도민이 체감하는 새 업무 발굴도 주문했다. 김영록 지사는 "중앙부처 업무보고가 '잼플릭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다"며 "중앙부처가 새롭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이 많은 만큼, 이

를 잘 분석해 전남 정책으로 만들어 많은 사업을 가져오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도 자체적으로도 토론을 통해 새 업무를 개발, 도민이 체감하고 도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업무를 하자"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에도 ▲수산 분야를 비롯한 각 중앙부처의 AX 프로젝트 유치 ▲신속한 군공항 예비후보지 지정과 이전 사업 계획 수립 ▲도민 품으로 돌아간 전남OK도민광장의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의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 철저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한 농가단위 책임방역 철저 등을 당부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 남구, 건강 약자 '천원 택시·돌봄 택시' 운영 월 2회 이용,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병오년 새해 신규 시책으로 이동 약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천원 택시'와 '돌봄 택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남구는 30일 "고령화 가속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이동 여건이 좋지 않아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2가지 이동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천원 택시는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요양등급 1~4등급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편도 기준으로 1회당 본인부담금 1,000원만 내면 월 2회 빛고를 택시를 이용해 광주권역 병원과 화순 전남대병원을 다녀올 수 있다. 나머지 택시비는 구청에서 1회당 광주권 병원의 경우 최대 2만원을, 화순 전남대병원

에 지급한다. 이와 함께 남구는 관내에 주소를 둔 산정특례 등록자 중 기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돌봄 택시' 이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회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 암 환자 등은 정기적인 치료와 검사가 필수인데, 스스로 이동이 어렵거나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천원 택시와 달리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월 2회 이용할 수 있다. 1회당 광주권역은 최대 2만원 범위 내에서, 화순 전남대병원엔 3만원까지 택시 비용을 지원한다.

천원 택시와 돌봄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각 가정에 빛고를 택시 이용권을 배부하며, 이용권 뒷면에는 활용 방법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임채일 기자

이 대통령 신년사... 1면에서 이어짐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은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라며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

다"고 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해서는 "산재 사망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고,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시설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또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이라며 "K-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다"며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

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이라며 "적대국에 대한 비용과 위협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뀌었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이라며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 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담화나 희망 사항이 아니다"며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

소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국력은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 참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이라며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투박투박 나아가겠다"며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군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10년 사업' 광주 군공항 이전 본격 추진... 1면에서 이어짐

군공항이전의 중요 분기점인 주민투표는 총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했을 경우 가결된다. 반대가 더 많을 경우 국방부는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야 해 군공항 이전은 수십 년 후로 또 미뤄질 수 있다.

광주시가 무안군에 약속한 지원금 1조 원도 큰 산이다. 정부와 광주시가 3000억 원, 15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 원은 종전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인데 공사기금 활용과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감면 등이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또 광주시는 종전부지를 '광주형 실리 콘텐리'로 개발하기 위해 내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무분

별한 아파트 개발은 안된다"고 밝힌 이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도 관심사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시점에 맞춰 민간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합의에 비추보면 민간공항 이전 시한은 2027년 말, 늦어도 2028년으로 못박힌 상태다. 그때까지 무안공항이 재개항하지 않으면 이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장은 "무안군의 군공항 유치 의사를 바탕으로 군공항 이전법에 따라 이전지 선정 절차를 책임감 있고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전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절차를 최대한 압축해 최대한 빨리 매듭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